

취재 요청. 보도자료

□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1박2일 상경투쟁

□ 일시.장소 : 11.14(화) 15:00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11.15(수) 08:30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 11:00 마포 경총 사무실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 문의 : 박세민(02-2670-0524, 016-343-2185) / 김은기(016-362-7826)

1. 최근 정부(노동부, 근로복지공단)가 신종 직업병으로 급부상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마련하여 노동계가 산재승인을 어렵게 하고 치료를 제한하는 방침이라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산재보험제도 발전의 미명하에 산재보험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정면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등 연말과 년초 사회적 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주노총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시도가 최근 일련의 산재보험의 공공성에 대한 공격과 맥을 같이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기업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재노동자들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산재보험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산재보험 민영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경총의 집요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노동부에서 어떠한 이의와 반대 입장도 표명하지 않아 왔습니다. 오히려 담합을 의심케하는 행보로 ‘산재보험제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산재보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은 심각히 우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는 밀실행정이라 판단합니다.

3. 민주노총은 12/14(화)과 15일(수) 산하 단위노조 안전보건 담당 간부 400여명이 참가하는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1박2일 상경투쟁을 전개합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경총 대상의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요구를 질의.항의 서한 통해 전달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4.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시대착오적 산재노동자관리 개악방침과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올바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고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고시 폐지.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을 요구하고, 논란을 가중 시키는 정부의 일방적 산재보험 제도 변경을 중단할 것과, 세 가지 요구 실현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5. 민주노총은 대화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반갑게 대화에 응할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산재보험제도 개악으로 일관한다면, 전체노동자의 총력을 모아 노동부와의 전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 끝 -

□ 첨부자료 : 첨부 1. 상경투쟁의 개요/ 첨부 2. 노동부 질의서한/ 첨부 3. 경총 항의서한

[첨부자료1. 상경투쟁의 개요]

□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와 산재보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상경투쟁**

□ 일시.장소 : 11.14(화) 15:00 과천정부종합청사 운동장

11.15(수) 08:30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 11:00-14:00 마포 경총 사무실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 내용 : 노동부.근로복지공단.경총 규탄 집회 및 질의.항의서한 전달

**1. 상경투쟁 일정**

**투쟁 1일차 : 12월 14일(화)**

14:30 노동부(과천 정부종합청사) 집결 완료

15:00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 폐기! 근골 부담작업범위 고시 폐기!

기만 대책 일관하는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15:30 노동부 항의서한 전달

18:00 식사

19:00 상경투쟁 참가자 전체 결의의 장(교육과 토론 병행)

1)근골인정기준 문제점과 대응 2)경총의 주장과 문제점 3)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혁방향

22:00 취침

**투쟁 2일차 : 12월 15일(수)**

06:30 기상

07:00 식사

08:30 “근골격계 처리지침 폐기! 불승인.강제종결.치료제한 횡포 중단!

적정치료 보장!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 민주노총 결의대회” 근로복지공단 앞

11:30 “산재보험 제도 개악! 민영화 음모! 안전보건 규제완화!

산재예방 관심 없는 부도덕 경총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마포 경총회관 앞

13:00 식사

14:00 현장 복귀

**2. 참석대상**

-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 안전보건 담당간부/ 안전보건 관련 단체 회원 등 400여명

### 3. 주요요구

#### ■ 노동부

- 현재 작성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즉각 폐기하라.
- 비현실적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라.
- 논란을 가중 시키는 일방적 산재보험 제도 변경을 중단하라
- 요구 실현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 ■ 근로복지공단

- 근골격계 산재환자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폭넓은 인정을 통해 산재환자들을 보호하라.
- 산재환자의 심리치료와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즉각 확대하라.
-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즉각 폐기하라.
- 자문의 제도 철폐하고 심사의 객관성 보장하라
- 심사청구 권리 박탈 중단하라
- 보험제도의 정책과 운영에 당사자인 노동자들 참여보장하라
-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라.

#### ■ 경총

- '나이롱 환자', '적정요양기간' 운운 말고 산재노동자 억압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 사업장 내 산재노동자 관련 생계보호 관련 '협약사항에 대한 개입'을 중지하라.
- 정부와 언론을 통한 '산재 노동자 죽이기'를 즉시 중지하라.
- 사회·공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산재보험 민영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 '안전보건 규제완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 문의 : 박세민(02-2670-9524, 016-343-2185) / 김은기(016-362-7826)

## 노동부는 시대착오적 산재노동자관리 개악방침을 철회하고 올바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2천만 노동대중의 고용, 임금, 산업안전, 능력개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4처 18부 16청 행정부의 핵심기구이다.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실천되면 그 국가는 민주·복지를 실현하는 국가일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독재·천민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으로 진입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국민의 의식수준은 독재·군사정부를 무너뜨릴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노동정책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 고용은 크게 불안정해졌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후퇴했으며 노사관계에서 공권력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일방적 공격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루에 10여 명씩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꼬박꼬박 죽어가고 있다. 통계 수치로 산업재해 빈도는 줄어들고 있는 듯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의문일뿐더러 사망률은 훨씬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강건너 불구경이다.

그나마 그간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근골격계질환이 최근 왕성하게 드러나고 있어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노동자들이 다소간의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조건에 연착륙하는가 싶더니 노동부에서는 다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만들어 산재노동자들에게 더욱 높고 두꺼운 진입장벽을 치려하고 있으며 낮지도 않은 노동자들을 현장에 강제로 복귀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미 로템과 호텔리베라 노동자들은 이 지침에 따라 무더기 불승인 사태를 맞았다.

노동부는 현재 산재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노동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알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산재승인을 기다리며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수개월씩 방치하는가 하면 그 질과 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자문의협의회를 통해 설명되지도 않는 불승인을 남발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질환이 깊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종결을 일삼고 재활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부추기고 주도하며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매년 수십명의 산재노동자들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는 사실을 노동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1월 중순 처리지침을 수정하였다. 수정안에는 의학적 상식적으로 터무니없었던 인정기준의 일부 요건이 완화되고 치료기한 명시내용이 삭제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처리지침 수정안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별표 1의 5와 7)에 ‘퇴행성질환’ 불인정 등 비합리적인 내용이 온전하며, 이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처리지침이 작성되더라도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자의 정당한 요양승인과 치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산재노동자 치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참석시키거나, 최소한 공청회라도 개최하여 의견을 묻고 제기되는 의견을 성실히 반영해야 함에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밀실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정된 처리지침에는 ‘요부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통상의 동작’ 해설과 해석에 있어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노동부 고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폐기를 합의했던 내용을 노동부가 일방파기 발표한 고시 내용을 가지고, 이미 보건의료산업 등 전체산업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11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골격계 직업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부담작업 11개 범위를 내용적으로 적용.고수하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시대착오적 행정에 대해 어떻게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경총이 집요하게 산재보험 제도 개악과 산재보험의 민영화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노동부에서 어떠한 이의와 반대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과, 어떤 담합이 있었는지 이제는 ‘산재보험제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산재보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노동부가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의미를 다시 각인해야 할 것이다.

민주와 복지를 지향하는 행정부의 기구로서 그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일로매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침’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산재 노동자 상태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필요하지 않는 정부기구이며 더 나아가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억압기구로 전락할 뿐이라는 사실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부가 지금까지 보여 온 구태의 모습을 탈각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울러 요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오는 12월 30일까지 공식 문서를 통해 민주노총에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재 작성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즉각 폐기하라.

둘째, 비현실적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

셋째,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라.

넷째, 논란을 가중 시키는 일방적 산재보험 제도 변경을 중단하고, 위의 세 가지 요구 실현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이상의 네 가지 요구에 대하여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요구한다면, 민주노총은 언제든지 반갑게 대화에 응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방적 집행과 묵살로 일관한다면, 민주노총과 제 민주.노동단체는 전체노동자의 총력을 모아 노동부와의 전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12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 산재노동자의 주검을 밟고 이윤을 챙길 수 있다는 경총의 믿음에 ‘감탄’하며

또 한사람의 산재노동자가 자살을 했다. 이제 전혀 낯설지도 않다. 한 해에 수십 명의 산재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루에 1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주검이 된다. 산재로 인한 고통을 견디고 견디다 결국 정신을 놓아버렸다.

경총이 ‘나이롱 환자’를 창조해내 모든 산재노동자들을 철면피,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결과였다. 경총이 그토록 원하던 또 한 사람의 ‘나이롱 환자’가 세상을 등졌다. 경총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뻔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는 원래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심약했거나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등이 있었기 때문이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경총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는 결코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총의 속을 너무나 훤히 알고 있다. 최근 경총은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 우수한 인재들은 ‘산재노동자 죽이기’에 이데올로그로 전략시켜 산재노동자 뒤를 케는 짓을 하고 ‘적정요양기간’ 설정이라는 시도를 통해 어떤 임상의사도, 산재의 의미도 모르는 일반인들조차 웃을 짓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산재보험을 아예 자본이 가져가 떡 주 무르듯 하겠다고 민영화시키겠다는 정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뿐이라, 노동자들로부터 짜낸 이윤을 밑천으로 정부와 언론을 통해 ‘산재노동자 죽이기’를 위한 각종 법·제도 개악안을 만들고 홍보하도록 종용했다. 더 나아가 이제 기업 내에서 노사협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재 노동자에 대한 약간의 생계보호 조항마저 걷어버리겠다고 덤비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총이 이러는 것에 놀라지 않는다. 경총은 지난 1970년 설립 이래 기업의 이윤확대만을 위한 압력집단임을 선언했고 이보다 더한, 더욱 추악한, 더욱 악랄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음을 익히 알고 있다. 경총의 온갖 행태는 산재노동자들의 주검만을 남기지 않았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를 만들어 냈고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를 남겼으며 더 뒤로 가면 70~80년대 전근대적이고 폭압적인 노무관리, 식칼테러에 군대식 작업장 문화를 만들어 낸 것도 경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경총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산재노동자의 주검과 고통을 밟고 챙긴 이윤이 얼마나 크고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총과

사업주들의 행태에 의해 더욱 증가한 산재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의 분노는 궁극적으로 기업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음을, 너희의 이윤 목적을 한 순간에 재로 변화시켜 버릴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경총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아래의 행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나이롱 환자’, ‘적정요양기간’ 운운 말고 산재노동자 억압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2. 사업장 내 산재노동자 관련 생계보호 관련 협약사항에 대한 개입을 중지하라.
3. 정부와 언론을 통한 ‘산재 노동자 죽이기’ 를 즉시 중지하라.
4. 사회·공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산재보험 민영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5. ‘안전보건 규제완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경총이 이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의 이런 작태 하나하나를 더욱 깊게, 그리고 멀리 알려낼 것이며 산재노동자들, 더 나아가 산재의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2천만 노동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민중전체의 분노를 모아 끈질기고 굽힘없는 전면 투쟁을 불사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1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